



윤석열 정부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2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사우디 동맹은
얼마나 틀어졌나?

4면

기후 위기, 해결할

시간과 방법이 있을까?

7~9면

철도 파업

지지한다

16면



교사 운동의 전망과 과제
10~13면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

언론 탄압 중단하라

조작 보도 운운은 빌미일 뿐

관련 기사 2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악랄한 언론 탄압 ... 준엄한 심판 내려질 것” 9월 14일 오전 압수수색을 막고 항의한 <뉴스타파> 직원들

성명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언론 탄압 중단하라: 조작 보도 운운은 빌미일 뿐.

오늘(14일) 오전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빌미로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 그리고 한상진·봉지욱 기자의 집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검찰, 우파 언론들은 <뉴스타파> 등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들에 “대선개입 여론조작”(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식 명칭), “가짜뉴스 온상” 등의 딱지를 붙여 조작 보도 범죄가 일어난 듯이 기정사실화한다.

그러나 지금 밝혀진 것은 <뉴스타파>의 취재원이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았을 가능성뿐이다. 오보 여부나 그 수준도 아직 알 수 없다. 하물며 <뉴스타파>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다는 증거는 없다.

2011년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했을 때 대장동 일당, 특히 조우형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 제기도 여전히 오보로 보기 힘들다. 부산저축은행 전 회장 박연호의 사촌 처남이자 대장동 사업 자금책이었던 조우형은 결국 수년 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 혐의로 처벌받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장동 주범과 노조 출신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당대

표 김기현 등은 이 일을 이승만의 3.15 부정 선거에 빗대며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는 황당무계한 소리까지 한다.

언론 탄압 공작질

언론 통제를 위해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이동관은 <뉴스타파> 폐간 운운하며, 가짜뉴스 보도 언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은 서울시 등록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파>의 등록취소 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일들은 그저 우기기를 통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 평소에 눈엣가시 같던 언론사와 기자들을 쥐 잡듯이 잡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게 엿보인다.

오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권력층에 대한 의혹 보도나 의견 보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팩트 보도도 오보를 피하려면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이나 정부 발표만 받아쓰기 해야 한다. 그런 기관들과 친화적이거나 유착된 보수 언론들만 신날 것이다.

이런 행태들이야말로 공작질이며 민주적 기본권인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짓이다. 지금도 이 정부는 핵 폐수 방류

가 안전하다는 ‘괴담’을 정부 공식 문서로 퍼트리고 있다. 간첩 조작 검사 출신인 이시원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중인데, 이 정부가 가짜뉴스를 문제 삼을 자격이나 있나?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고,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검사 윤석열의 수사 무마 의혹을 없던 일로 만들려 한다. 그와 연관된 일명 “50억 클럽” 수사는 아주 부실하게 하면서 말이다.

투쟁 억누르기

또한 윤석열은 이번 기회에 정부 비판 언론이나 보도를 억압해서 정부와 우파에게 유리한 이념 지형을 형성하려고 한다. 물론 내년 총선을 많이 의식하고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윤석열은 대중 수준에서 매우 부정적 여론에 직면해 있어 커다랗게 떠오를 수도 있는 투쟁들을 억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같은 탐사 보도 언론, 특히 기자까지 겨냥한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내부 고발이나 정보원들을 위축시키는 입단속 효과도 노리는 것이다. 여권 권력자들에 대한

탐사 보도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을 지지하며 정부 비판 보도를 이어온 <시민언론 민들레>도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대대적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후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더 받았다. 최근 MBC 기자 개인들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러한 언론 탄압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대중에게 감춰야 할 일을 많이 벌였고, 또 벌일 것이라는 신호다.

윤석열의 언론 탄압을 반대해야 한다.

2023년 9월 14일

노동자연대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긴 글
‘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 ★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을 보아 넘기지 말라
- ★ 미국 자동차 파업은 기업주들을
타격할 수 있다
- ★ 독자편지
학교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를 조직한 경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장관 결재 뒤집을 수 있나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이 윤석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졌다.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유린했다는 의혹에 직면한 것이다. 입만 열면 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더니 말이다.

채 상병 순직은 윤석열 정부와 군 고위 장교들이 평범한 사병들을 그저 소모품이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병사의 어머니가 한 말)로 여긴다는 점을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채 상병은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사망했다.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채 상병의 부모는 절규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나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 들어가는 위험한 작업인데도 해병대 지휘부는 병사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채 상병 소속 부대는 실종자 수색도 임무에 포함된다는 지시를 현장에 도착해서야 받았다. 그래서 애초 출동할 때 삽, 갈퀴, 고무장화만 챙기고 구명조끼는 챙기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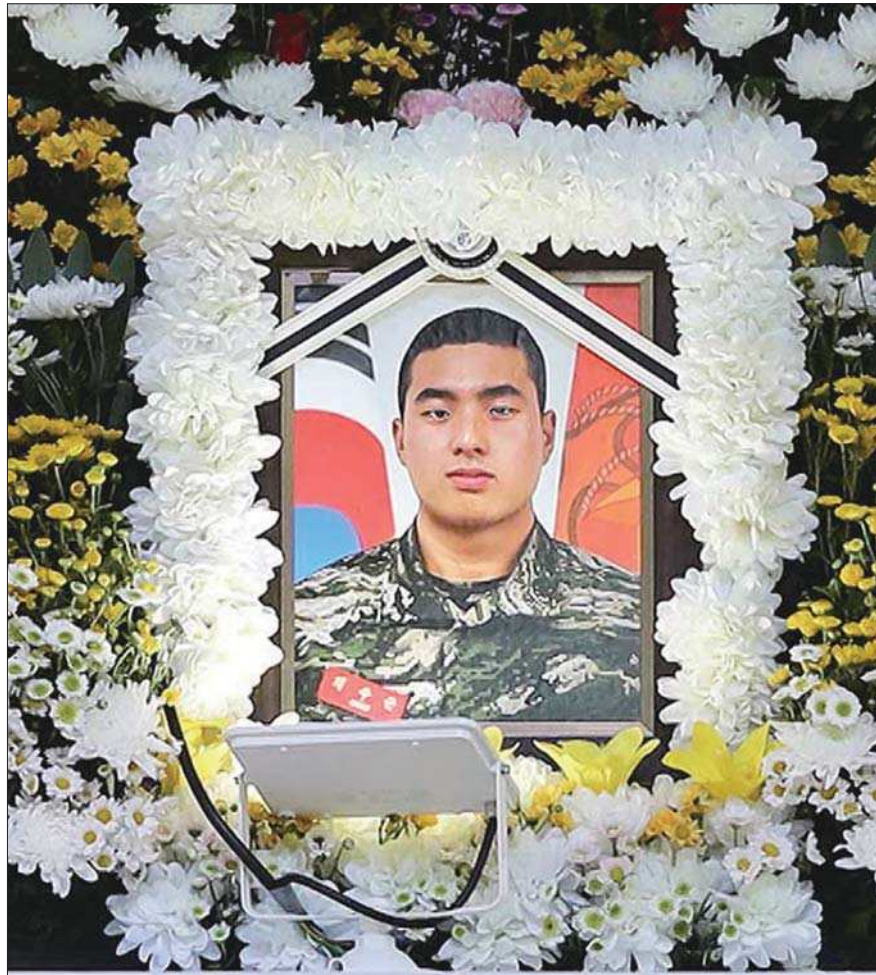
작업 첫째 날은 일렬로 하천 옆 도로를 따라 걸으며 떠내려가는 물체를 살피는 방식으로 수색했다. 그러나 이를 본 임성근 사단장이 ‘4인 1조로 무릎 아래까지 물 속에 들어가 바닥을 찔러 가며 정성껏 탐색할 것’을 지시한다.

이 때문에 둘째 날은 내성천에 직접 들어가서 수색했다. 대대장은 임 사단장의 질책에 압박을 느꼈는지, 허리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결국 채 상병 등 8명이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와 채 상병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 작업을 지시한 사단장은 면죄부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내성천 상류의 안동댐, 임하댐, 영주댐이 모두 방류 중이었다. 그러나 임 사단장은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 수색할 것을 지시했다.

임 사단장의 관심사는 사병 안전도, 실종자 발견도 아니었다. 그는 눈에 확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해병대 지휘부의 무책임으로 역을하게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떠도록 해병대의 빨간티로 복장을 통일할 것, 방송 차량이 왔을 때 군 기본 자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 등 언론 홍보에 신경 썼다.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얼룩무늬 스카프를 얼굴에 두르고 작업하라는 ‘깨알’ 지시도 있었다.

임 사단장은 사고 2시간 전, 대원들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모습이 여러 신문 1면에 보도된 것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훌륭한 공보 활동’을 칭찬하며 흡족해 했을 뿐,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은 것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초동수사에서 이런 과정을 확인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게다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7월 28일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고,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하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하기까지 했다.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7월 30일에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이 함께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차례로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다음 날 언론에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 날 국방부는 예정 시간

을 1시간 앞두고 갑자기 언론브리핑을 취소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사건 재검토를 차관에게 지시했다. 동시에, 유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는 등 외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즉,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삭제하라는 것이었다.

“VIP”의 명령

박 대령은 용기있게도 이를 거부하고, 8월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와 해병대는 박 대령을 수사단장에서 해임하고 항명수괴죄로 형사 입건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군사법원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했다.

박 대령이 8월 29일 국방부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7월 31일 유재는 법무관리관의 연락을 받은 후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국방부가 돌변한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 하고 되

문자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면 국방부장관이 이미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수정하라고 한 일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박 대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윤석열이 왜 그토록 임 사단장을 비호하는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윤석열 또는 그 측근과의 이런저런 인맥이나 인연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윤석열이 그동안 여러 참사의 책임을 하급 실무자들에게 떠넘기고 고위 책임자들의 책임은 면제해 온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채 상병 사건 직전 오송 지하철도 참사가 났을 때, 윤석열과 충북도지사 김영환은 모두 자신이 현장에 갔어도 달라질 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말의 원조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인데, 그는 이태원 참사 발생을 보고받고도 곧바로 현장으로 가지 않았다. 이를 추궁 받자 이상민은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채 상병 사건 직후였던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탄핵소추를 기각해 이 정권 최고위층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줬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또다시 고위 장성에게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가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또, 윤석열은 유우성 간첩 조작 책임자 이시원, 경찰 첩자였던 김순호 같은 자들을 요직에 중용해 왔다. 다른 고려 없이 체제와 정권 수호에 매진하는 공직자가 중용될 거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임 사단장이 사병 안전, 실질적인 실종자 수색, 수해 복구보다 정권에 잘 보일 언론 노출에 더 신경 쓴 것도 이런 인사 정책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채 상병 참사 당시는 경북과 충북 등의 수해 참사를 둘러싼 여론이 정부에 불리할 때였다. 수해 복구에 군을 신속하게 투입한 것은 군의 이미지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여론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핵 폐수 방류 용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역사전쟁, 교육부의 징계 위협을 철회시킨 교사 운동 등과 더불어, 이 사건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임준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사우디 동맹은 얼마나 끈끈라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은 미국·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하기에 여념이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피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이 이번 주 런던을 방문한다. 영국 권력자들은 — 유약한 노동당도 — 늘 그랬듯 빈살만에게 알랑거릴 것이다.

지난달 [노동당 전 대표의 이름을 딴] 토니블레어연구소는 토니 블레어 자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빈살만에게서 돈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반정부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납치·살해한 배후가 빈살만이라고 미국이 지목했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절대 왕정과 미국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이는 바이든이 [2020년] 대선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왕따”로 만들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적·지정학적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 사우드 왕가와 그 친구인 이웃나라 아랍에미리트(UAE)의 폭군들은 미국이 2011년 아랍 혁명에 맞서, 또는 역내 최대 경쟁자인 이란이슬람공화국 정권에 맞서 자신들을 충분히 지켜 주지 않았던 데에 골나 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푸틴의 러시아와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함으로써, 냉전기에 그랬던 것처럼 중동의 역내 실세로 다시 자리잡았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더 근본적인 요인은 에너지다. 두 나라 모두 세계 3대 석유·가스 생산국에 속한다. 둘의 핵심 경쟁자는 미국이다.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미국의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오펙 플러스(OPEC+)’* 카르텔에 속해 있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산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그래서 지난해 2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러시아에 맞서려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버선발로 쫓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적 혁명이라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먼저,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정상화 합의를 중재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왼쪽)과 악수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는 푸틴의 러시아와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가까워지는 근본적인 요인은 에너지다. 두 나라 모두 세계 3대 석유·가스 생산국에 속하고, 둘의 핵심 경쟁자는 미국이다.

비아가 다른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아르헨티나·이집트·에티오피아·아랍에미리트)과 함께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5개국 모임)에 가입했다.

그렇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결별한 것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안보 면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이 공급하는 무기 체계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브릭스 국가들이 응집된 동맹으로 뭉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줄타기

그러나 분명 빈살만은 미국·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하기에 여념이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논평가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및 러시아·중국과 구축한 가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장 수요에 이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당면해서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갈등이 유가를 둘러싸고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러시아는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감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이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 휘발유 소매가는 미국 선거의 단골 중요 이슈인데, 이미 휘발유 소매가가 올해에만 25퍼센트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는 술한 이슈에도 여전히 공화당의 1등 대선 주자인데 그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추할 거야, 여보게들, 시추할 거야 … 우리는 에너지 가격을 팍팍 깎을 거야.”

그러나 빈살만은 그가 추진하는 현대화 계획 ‘비전 2030’에 자금을 대려면 유가를 더 올려야 한다. 유라시아 그룹[건설업 기업]의 라아드 알카디리에 따르면, “진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재정을 운영하고 빈살만의 장기적 야망을 실현하려면 유가가 배럴당 85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럴당 70달러로는 [신도시] 네옴 건설 같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없다.”

알카디리는 이렇게 덧붙인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친구가 별로 없다. 미국 정치권이 고유가나 또 다른 경기 둔화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려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증거 1호’로 지목될 위험이 다분하다.”

바이든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정기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리번은 또한, 바이든의 성패를 가늠할 “궁극적 지표”는 “미국의 깔린 당 휘발유 소매가”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빈살만과 미국의 관계는 당분간 계속 끈끈해질 것이다.

출처 Alex Callinicos, ‘How stretched is the US-Saudi alliance?’, (2023. 9. 12) / 번역 박이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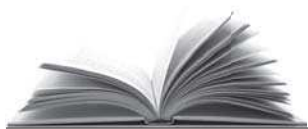
용어설명

오펙 플러스(OPEC+)

석유수출기구 오펙(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오펙 비회원국인 주요 산유국들을 포괄하는 협의체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 국가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선진국들은 주로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표현이다.



서평 |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른다》

서방·러시아 모두에 반대하며 전쟁의 성격을 밝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 되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인 미디어 벤저민과 니컬러스 J.S. 데이비스는 미국의 반전·평화 단체 ‘코드핑크’의 주요 활동가다. ‘코드핑크’는 영국의 전쟁 반대 연대체 전쟁저지연합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국제 캠페인을 벌여 왔다. 한국에서도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쟁 반대 집회가 열린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때부터 본지는, 이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우크라이나를 대리자로 내세운 서방과 러시아 간 대결의 성격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책의 저자들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성격을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하지만, 이 전쟁의 끝은 이 전쟁으로 최대한 득을 보려는 서방 지배자들과, 선불리 전쟁을 멈추면 잃을 게 많은 푸틴의 손익 계산에 달려 있다. 그리고 수많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 병사의 목숨이 이 ‘거대한 체스판’의 제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방 언론들과 지배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순전히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흔히 묘사한다. 나아가 이 전쟁에 ‘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렸다’며 군사 동맹 나토 강화와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도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며 전쟁 지원을 정당화한다.

문제는 서방에 비판적인 일부 좌파들도 (국제적으로는 온건 좌파 전체, 심지어 일부 혁명적 좌파까지) 이를 수용하거나 혼란에 빠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들은 모두 ‘누가 먼저 총을 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누가 먼저 총을 쏘는지’ 지목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공방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 어느 한 쪽을 가리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맥락 속에서 의



서방은 이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서 결정적 구실을 하고 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스(HIMARS,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미를 갖는다. 그리고 맥락을 짚는 것은 훨씬 복잡한 일이다. 그 무대가 우크라이나라는, 역사와 정치가 낯설고 복잡한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 만큼 서방·러시아 양측 모두를 반대하는 관점에서 이 전쟁의 배경과 맥락을 짚어 주는 책이 나온 것은 반가운 일이다.

맥락

저자들은 서방의 관여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물음과 반론을 잘 다루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달린 것 아닐까?’, ‘무기 지원은 위험하더라도 제재는 필요한 것 아닐까?’ 등등.

저자들은 나토 확장으로 어떻게 이 전쟁이 예비되어 왔는지, 서방이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개입해 왔는지, 민스크 협정 파탄과 개전 직후 중재 노력 좌절에서 서방이 했던 구실이 무엇인지를 꽤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서방 정부와

언론의 위선과 나토에 대한 비판도 날카롭다.

동시에 저자들은 서방을 비판하다가 진영 논리로 기우는 적잖은 좌파들과 달리, 러시아의 침공 또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저자들의 대안은 평화 협정 촉구로 모아진다. 물론, 이 전쟁은 거대한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러저러한 협정으로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은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려는 노력과 분리될 수 없다. 민스크 협정이 좌절되고, 유엔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TPN)을 어느 주요 핵 보유국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이 오만하고 푸틴이 무모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자본 축적 경쟁이 국가의 힘과 결합되는 국제 경쟁 체제라는 사실과 관련 있다.

이 책이 그런 결론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 책은 전쟁 반대 운동을 건설하는 데서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일독을 권한다.

이원웅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른다

— 이분법을 넘어 한 권으로 이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디어 벤저민, 니컬러스 J.S. 데이비스 지음
이준태 옮김, 오월의봄, 252쪽, 18000원



드라마평 | 〈마스크걸〉

외모지상주의와 인간 소외를 신랄하게 보여 준다

8월 18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스크걸〉이 인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부문(비영어)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 화제작이다.

드라마 〈마스크걸〉은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한 여성과 그 주변인의 삶을 끔찍하게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외모지상주의

드라마의 전반부는 춤과 노래를 좋아하며 연예인을 꿈꾸던 어린이 김모미가 사회의 미적 기준에 맞지 않는 외모로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못생긴' 모미의 춤과 노래 실력은 현실의 벽 앞에 무력했다.

이후 20대 모미(이한별 분)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지만 회사에서도 외모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모미는 퇴근 후 마스크를 끼고, 화려한 분장을 하고, 춤을 추며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는 이중 생활을 한다. 그러나 이중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성형 카페에 들어가 정보를 찾는 등 외모에 대한 집착을 멈출 수 없다. 이후 같은 회사 동료인 주오남(안재홍 분)이 모미의 정체를 알게 되며 이야기가 본격 전개되기 시작한다.

외모로 좌절을 겪고 그렇기에 외모에 대한 집착을 멈출 수 없는 20대 모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모가 스펙이고 자신감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모미로 표상되는 여성들의 소외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다.

모든 것을 사고파는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의 몸까지 상품화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획일적 이미지를 퍼뜨려 다수 여성이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게 만든다. 2020년 Gallup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은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여성 5명 중 1명은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은 많은 여성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

이런 외모 압박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체계적으로 부추겨지고 있다. 예컨대 모집과 채용 때 여성의 용모 기준을 내거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지 오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외모를 중시한다. 그래서 '얼굴도 스펙'이라며 '면접 프리패스상'을 위한 취업 성형이 부추겨지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도 화장을 해야 한다는 식의 온갖 압력이 존재한다. 대중매체에서도 끊임 없이 외모 관리 비법이 소개되고, 기업



드라마 〈마스크걸〉은 주인공 김모미의 삶을 통해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소외와 고통을 보여 준다

과 성형외과 병원들은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불안을 자극해 잇속을 차린다.

'성형 강국' 한국의 현실은 세계적인 추세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ISAP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성형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으로 추정된다. 성형이 그 자체로 거대한 산업이 된 것이다. 성형 카페나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금만 둘러봐도 심각한 성형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 어떤 성형 광고에서도 이런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주오남은 주변 동료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며 인터넷 방송에 집착적으로 빠져드는 인물이다. 회사와 사회 생활에서 온갖 무시와 차별을 겪는 모미와 주오남은 인터넷 방송에서만은 무시당하지 않고, 개성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한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될수록 그조차도 허울뿐인 소통이었음이 드러난다. 진정한 소통을 염원하지만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아 고통스러운 요즘 청년 세대의 모습을 힘껏 보여 준다.

소외

이 드라마의 캐릭터들은 어느 하나 마음 놓고 애정하고 응원할 수 없다. 캐릭터들이 선과 악으로 납작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복잡하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자본주의가 가하는 경쟁 압력과 그에 따라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 패배감, 두려

움, 주변 동료에 대한 적대감 등 소외의 민낯이 드러난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뒤떨어질까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거짓을 꾸며내는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다. 물론 이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우정이 싹튼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장점 중 하나다. 어느 캐릭터 하나 단순하게 미화하지 않고, 소외로 고통받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린다.

마지막으로 성형을 한 모미의 인생 2막이 여러 상업 영화나 〈렛미인〉 같은 성형 프로그램의 스토리와 달리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이 사회의 미적 기준에 자신을 아무리 맞춰도 다른 사회적 조건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삶이 극적으로 바뀌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이 드라마는 성형을 미화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며 훈계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사회의 단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신랄하게 고발한다.

드라마에서는 폭행, 살인 등으로 현실이 과장되게 그려진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외모지상주의와 성차별적 체제는 후유증을 동반하는 성형, 식이장애, 정신적 고통 등 여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어쩌면 현실이 더 가혹할 수 있다.

극에 몰입하도록 돕는 배우들의 열연도 볼 만하다.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 추천한다.

이지원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간) (주)엠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월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기후 위기, 해결할 시간과 방법이 있을까?

장호중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저자

이 기사는 9월 20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 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제는 누구나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자연재해가 더 잦아지고 위력도 커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름철 호우 패턴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수준을 넘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사회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형화되고 있고 30도를 넘는 폭염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더 심각한 재난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고, 8월은 두 번째로 더운 달이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실로 놀라울 정도여서 기상학자들은 올해 시작된 엘니뇨가 내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두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며 시급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후 재난의 사회적 요인

우리는 기후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또 다른 패턴도 발견합니다. 재난의 규모가 극대화하는 데에는 늘 사회적 문제가 결정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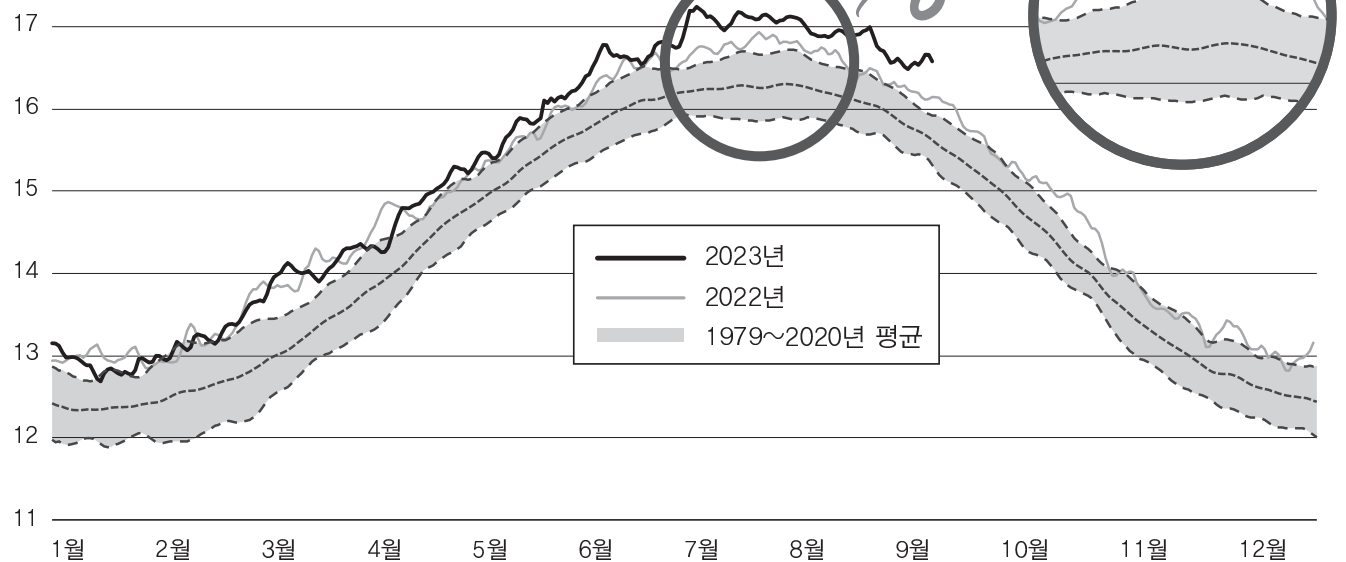
지난해 여름 서울의 반지하방에 살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물에 익사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뿐 안전 주택 공급에는 투자하지 않은 것이 이런 비극을 낳았습니다.

올해 일어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된 제방, 작동하지 않은 배수 펌프, 차량 통행을 제때 통제하지 않은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관료들은 '예상치 못한' 폭우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런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가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 얼마나 둔감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소방서 등

역사상 가장 더운 2023년 여름

세계 평균 기온



자료 출처 ClimateReanalyzer.org

안전 관련 일선 현장은 언제나 인력과 자원 부족에 시달립니다. 국가의 우선 순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대중의 필요와 안전을 더욱 희생시켜 왔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소방 시설이 낙후하거나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소방 호스에서 아예 물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속되는 기후변화와 사회의 뒤집힌 우선순위라는 두 재난 사이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한 30년

약 30년 전에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기후변화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그 30년 사이에 전 세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전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IS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G20 국가들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쏟아부은 공적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4000억 달러(약 1871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도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기로 합

의해 놓고, 이를 완전히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유엔 기후변화 협약 30년의 역사는 완전한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 실패의 핵심 요인은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대책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야말로 기후 위기의 진정한 원인인데 말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기후 위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두 개의 적대 관계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자본이 임금노동을 착취하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자본들 사이

의 경쟁 관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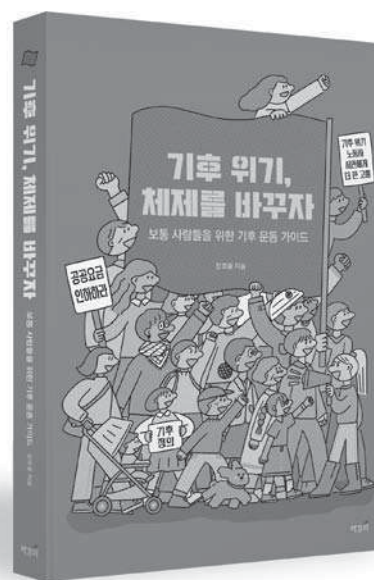
서로 극한의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혁신을 도입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키우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류 경제학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것은 무시하거나 은폐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결국에 기후변화를 일으킨 것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정적 외부 효과"일 것입니다.

자본 간 경쟁과 국가 간 경쟁 시스템은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이자 기후 위기 대책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요 강대국들은 거대 화석연료 기업들의 근거지이고, 그 나라들의 산업은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합니다.

선진국들은 '탄소 중립'을 외치지만 하나같이 책임을 다른 국가들로 떠넘기는 데 골몰합니다.

선진국 정부들과 기업들은 신기술 도입,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탄소 포집 등 상쇄 기술 개발이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처들의 핵심 취지는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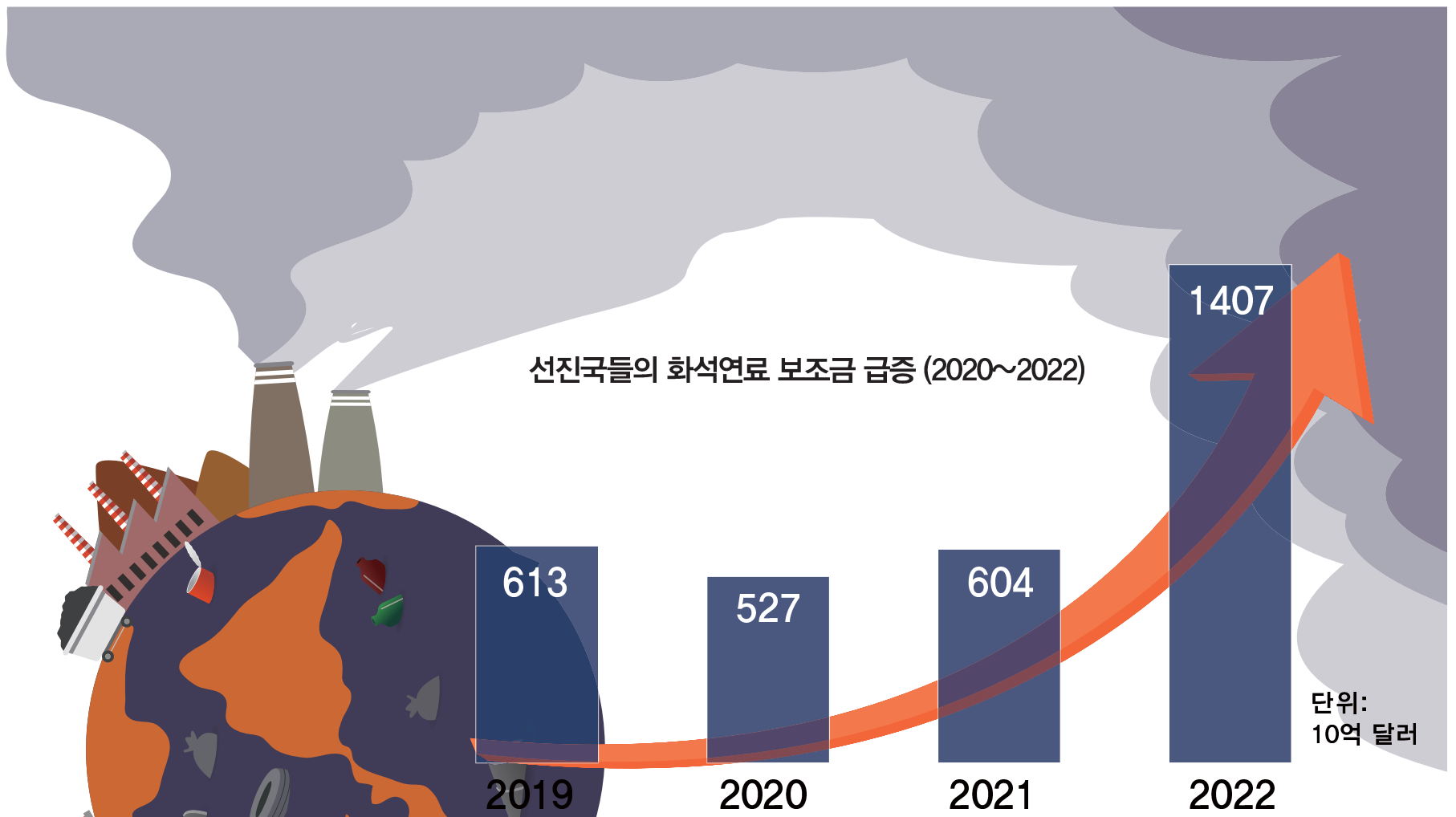
2022년 5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를 보면, 전 세계 석유·가스 기업들은 2030년까지 "195개의 탄소 폭발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탄소 폭발탄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산화탄소를 10억 톤 이상 배출하는 초거대 석유·가스 채굴 사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195개의 탄소 폭발탄으로 배출될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기후 운동 가이드

장호중 지음, 책갈피, 304쪽, 20,000원



이산화탄소 총량은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18년치에 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급속한 전환에 저항하는 것은 화석연료 기업들만은 아닙니다. 화석연료 산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연관 산업들과 전체 금융 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미래의 이윤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자본가들조차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이 느리는 이뤄지는데 최선이라고 여깁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제이슨 히켈 등은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한 11개국의 탄소 배출량 감소치를 계산해 최근 발표했습니다.

11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서 경제도 성장시키는 이른바 ‘딤키프링’에 성공했다는 나라들입니다. 호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범국으로 꼽히는 11개국의 2013~2019년 배출량 감축률은 연평균 1.6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0년이 넘습니다.

더욱 가까워진 위험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엔 산하의 과학

자들이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기후 재앙을 피하려면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2026년 전에 그 1.5도를 넘길 가능성이 48퍼센트나 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최소한 수억 명이 극단적 자연 재해에 내몰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이 경고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후 위

기는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그 충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쟁, 극우의 준동, 인종차별, 여성차별 등은 기후 재난이라는 불꽃을 끄집한 비극으로 만들 위력을 가진 연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팬데믹 대처를 돌이켜보면 한 가지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체제의 지배자들은 위기가 닥치면 평범한 사람들 중 일부의 생명을 아주 쉽게 포기할 태세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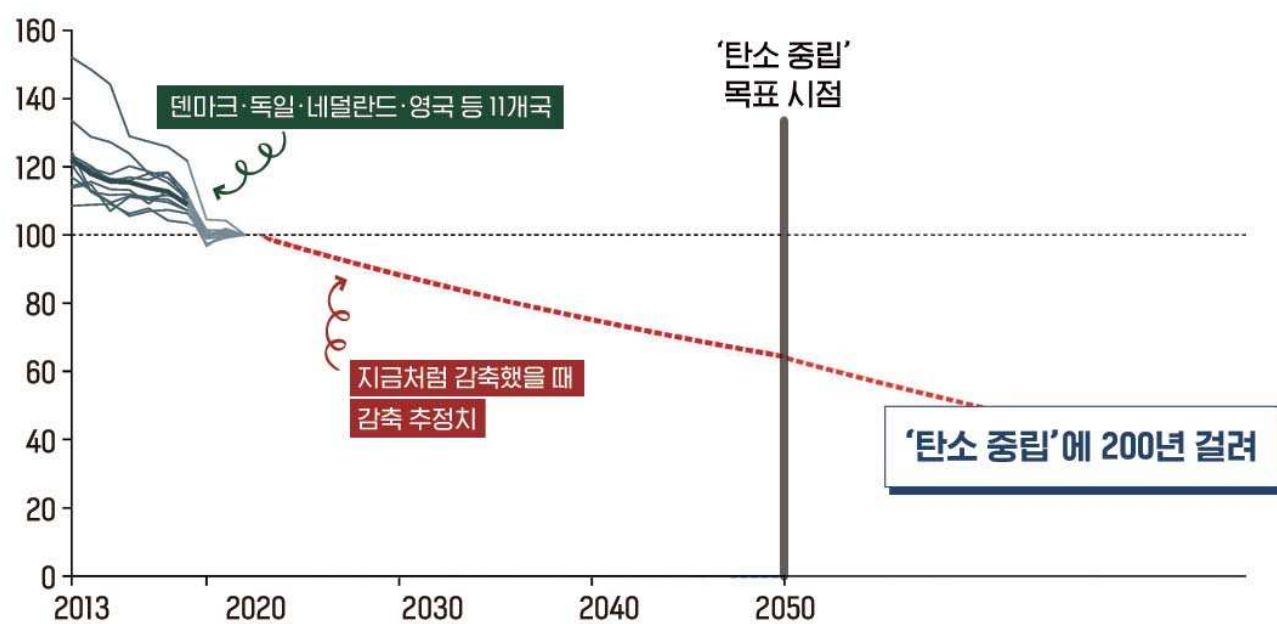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에는 2050년에는 약 2억 명이 기후 변화로 살던 곳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아시아 나라 출신으로 지금대로라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유럽 정부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들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만 7000여 명이 지중해에서 사망·실종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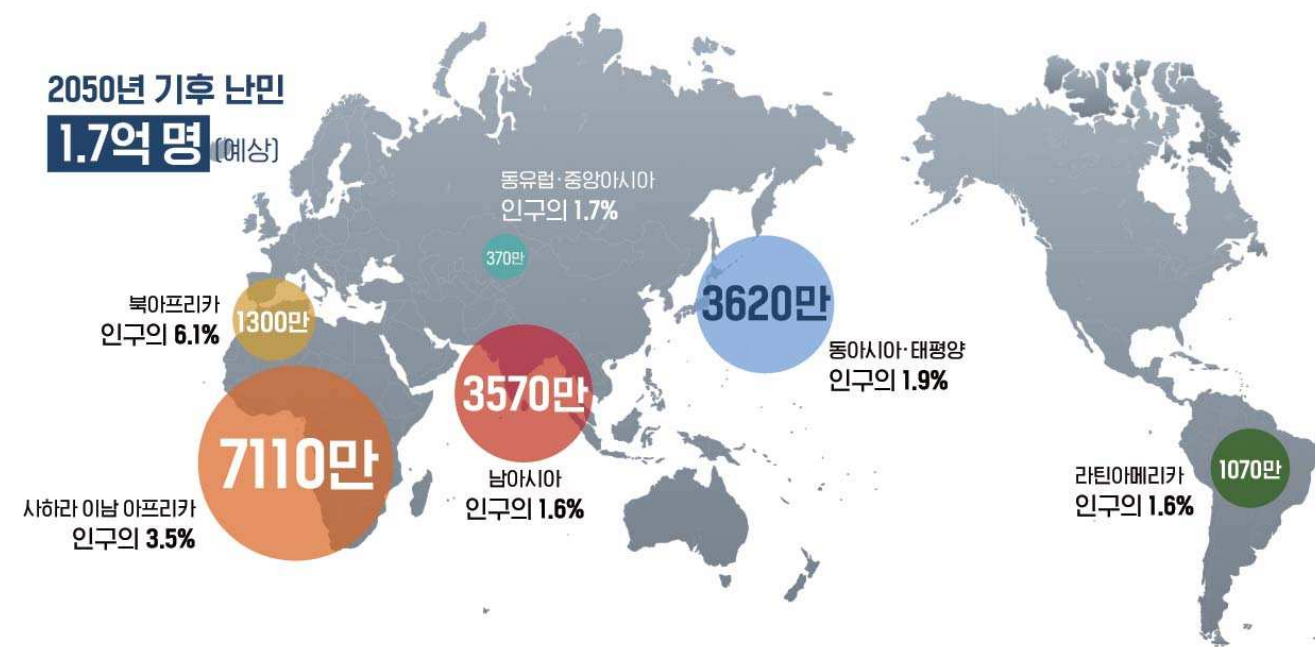
다행히 우리는 2018년 이후 기후 운동이 기존의 우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급진적이고 활력 있는 대중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인 예란 테르보른은 이런 변화를 받기며 2022년에 쓴 글에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네 가지 흐름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앞서 언급한 기업

친환경 ‘모범국’?





주와 정부의 대처 방식입니다. '하던 대로 하기'와 '새로운 이윤 획득 기회로 삼기'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두 가지는 그린 뉴딜과 탈성장론을 포함하는 반자본주의적인 흐름입니다.

그린 뉴딜과 탈성장

그린 뉴딜은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와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 같은 좌파가 제시한 대안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후 위기도 멈추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도 늘리자는 정책입니다. 전 세계 기후 운동이 이 주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면서 노동계급 사람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린 뉴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자본주의 국가를 통해 서민 친화적 기후 해법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뒤 그린 뉴딜이 탄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기후 운동이 바이든의 피조된 기후 정책에 만족하라는 압력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린 뉴딜을 실행하려면 정부가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기업주들에게서 대규모 재원을 징발하고 화석연료 기업들을 폐쇄해야 하는데, 바이든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본가들과 기성 권력자들은 정말로 실효성 있는 기후 대책에는 격렬히 저항할 것입니다. 이를 제압할 방법이 없는 대안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성장론은 경제성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중 좌파적 버전은 명백히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을 더 합리적인 생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과 공통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을 더 합리적 생산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려 나설 때 어떻게 맞설 것인지 전략 문제를 공백으로 남겨 두는 약점이 있습니다.

웬만한 노동계급 사람들도 생활수준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동 책임을 물으면 그런 대안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혁명적 대안의 절실함

마지막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의 원인도, 그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끝내고 완전히 다른 사회를 건설해야 기후 위기도 멈출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후 위기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출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개혁을 위한 투쟁을 얕잡아 보거나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혁명들은 부분적 개혁을 위한 투쟁들에서 발전했습니다.

근본적 체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화석연료 채취 금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정의로운 전환 등을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 운동이 성장하고 전진하도록 애쓰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운동들이 서로 연결되어 투쟁이 심화되고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게 되도록 애쓰는 뜻입니다.

때로는 부분적 성과를 거두고 때로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투쟁 경험을 통해서만 대중은 혁명적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 재앙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중의 투쟁과 각성을 기다릴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적 대안이 절실합니다. 실패를 거듭해온 방법들을 되풀이하는 것은 낙담과 사기 저하를 낳을 뿐입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간

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 위기가 가속되면 재난과 고통이 심각해지겠지만, 그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와 계급투쟁도 심화할 것입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엄청난 일들이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기후 주요 선진국들의 석탄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도 시작됐고요. 기후변화는 세계 도처에서 파괴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중의 문제 의식도 달라질 것이고, 대규모 반란과 혁명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기후 운동이 더 크고 강력해지려면 노동계급의 참여가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자본 축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권력,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는데 그 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흔히 논쟁 구도를 '일자리냐 환경이냐'로 몰아가고, 적잖은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기후변화 대응이 노동자들을 위협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을 위협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기후 대응을 결합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기후 위기가 심화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저절로 기후 운동에 참여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혁명적 좌파가 노동자들의 일자리 및 노동조건 투쟁과 기후 운동을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일자리 대안과 반자본주의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이윤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유의 힘을 간과하면 기후 운동은 소수의 급진성에 기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는 이런 운동을 어렵지 않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심화 속에서 다양한 투쟁이 일어나고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릴 텐데 혁명적 좌파는 그 가능성을 내다보며 현실화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투쟁에 참여하면서 그 투쟁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지배자들의 이 간질에 맞서 운동이 단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교육부를 지원하는 사람들

20만여 명이 참가한 9월 2일 7차 집회

두 달간의 전국교사집회를 잠시 돌아보며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 교사 운동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전국교사집회'는 거대한 대중 운동으로 발전했다. 교사들은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주말 집회를 매주 이어 갔(가고 있다).

2차 집회부터 금세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 9월 2일 7차 집회에는 놀랍게도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 두 달도 안 돼서 집회 규모가 40배 이상으로 성장한 것이다. 9월 4일까지 집회 규모를 연인원으로 따지면 50만 명이 넘는다. 국내 유·초·중등 교사 수가 50만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숫자다.

매 주말 집회마다 수만 명이 참가한 것도 대단하지만, 단체 행동권(파업권)이 없는 교사 10만여 명이 평일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집회에 참가한 것도 유례 없는 일이었다.

정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몇 차례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하며 교사들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의 방안은 현장 교사들이 보기에 별 실효성이 없는 데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나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등으로 동참하겠다는 교사 서명은 8만 명에 달했고, 재량휴업일 지정을 계획 중인 학교도

500여 곳에 달했다. 주말 집회만으로는 안 되고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물론 교육부는 8월 2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엄정 대응" 기조와 달리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상이한 입장이 나타났다. 서울, 세종 등 진보 교육감들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입장을, 경기, 강원 등 보수 교육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사들의 운동이 커지자 사용자 간에도 이견과 갈등이 생긴 것이다. 교총은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고 국민 여론을 의식해 당일 집회를 저녁 문화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공교육 멈춤 행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27일 징계 협박 수위를 높였다. 집회 참가, 연가·병가 사용 및 승인, 학교 임시 휴업 등 행위를 한 경우 학교장과 교사 모두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결국 8월 27일 밤에 집회 운영팀은 공지문을 내어 이렇게 밝혔다. "[9월 4일]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협박 수위를 높인 탓도 있지만, 9.4 집회에

반대하는 교사들이 '집회를 강행하면 교사들을 분열시키고 운동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집회 운영진을 압박하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협박 공문을 별 의의제기 없이 학교 현장에 내려보냈다. 일부 진보 교육감은 말로는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면서도 교육부 눈치를 보면서 한 발 물러서서 뒷짐을 졌다.

당시에는 교사 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를 두고 기로에 놓인 시점이었다. 무엇보다, 국가 탄압에 직면해 운동을 어떻게 전진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8월 26일 6차 집회가 열린 날 진행된 전교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일부 대의원들이 전교조가 9월 4일 행동에 조직적 참가를 결정하고 대내외에 호소해 행동에 참가하려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우산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운동이 국가 탄압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지도부는 운동을 사실상 정부 공격에 방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행히 9.4 집회 운영진이 해체된 다음 날 새로운 집회 운영진이 꾸려졌다. 9월 4일 집회를 방해하는 교육부에 대한 반감과 함께, 싸울 자신감이 맞물리



전교조

절박한 요구 7월 29일 열린 2차 집회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중징계 위협에도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온다

면서 20만 명이 넘는 교사가 9월 2일 7차 주말 집회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교사가 참여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5만 명이, 부산 등 13개 지역의 추모 집회에 7만여 명이 참가했다.(전교조 지도부가 이러한 혼란과 우여곡절을 보지 않고 ‘점들의 연대’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추켜세우는 것은 결과론적 사고일 뿐이다.)

특히, 9월 4일 집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드러났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 혼란 초래 책임 회피 이주호는 반성하라,” “징계 운운 권한 남용 교육 분열 이주호는 사과하라,” “직권 남용 이주호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사회자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 교육부와와의 교섭에 교원단체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9월 4일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사 운동이 미친 사회적 효과

교사 운동은 요구를 당장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대중 운동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낳고 있다.

첫째, 교사들이 겪고 있는 온갖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부각시켰다. 교권 보호에 대한 광범한 지지가 형성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비롯해 많은 노조와 사회단체들이 9월 4일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부모들 다수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교권 보호는 보수적 요구라며 교사 운동에 거리를 두던 일부 좌파들도 운동이 지속되고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자 지지 입장 발표나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투쟁을 통해 얻은 노동자들의 경험이 중요하다. 운동에 참가한 많은 교사, 특히 청년 교사들은 생애 처음으로 집회에 참가한 것일 수 있다. 대규모 운동을 통해 교사 노동자들도 단결해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권의 보호자가 아니라 침해자라는 점을 깨닫고, 교사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투쟁을 통해 교육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랐다. 운동이 확대하면서 조직화도 성장했다.

셋째, 9월 4일 집단행동은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이윤 타격이라는 산업적 효과는 미약할지라도, 단체 행동이 금지된 교사들의 집단적 연가투쟁은 정부에 맞서는 정치적 효과가 크다.



교사들의 행동을 학부모들도 지지하다

이 때문에 교사 운동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등 고무적 효과를 냈다. 특히 교사와 비슷한 처지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서비스 노동자 등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을 고무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해 전반적인 계급투쟁과 세력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교원평가에서

성희룡 등 교권 침해 논란이 있는 데다 당장 교사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은 대규모 교사 운동이 낳은 효과 중 일부다.

전망과 과제

9월 4일까지 규모를 키우며 달려온 교사 운동은 잠시 숨을 고른 후 9월 16일 주말 집회로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 12면으로 이어짐



교사의 위기는 자본주의 학교 시스템의 본질에서 비롯한다

▶ 11면에서 이어짐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를 치른 뒤에도 계속되는 교사들의 비극을 보면서 많은 교사가 현실을 바꿀 때까지 행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

운동이 지속되면서 교사들의 바람과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가 크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교사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 정부가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보호 및 교권 강화 종합방안'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에 변한 것은 거의 없다. 바뀐 것이라고는 학교 전화 통화 연결음뿐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린다.

오히려 현장의 문제만 더 키운다는 불만도 나온다. 가령 학교에서는 당장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재정과 인력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갈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교사들의 일부 고충이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법령과 제도 정비만으로는 교사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어렵다 (물론 법안이 제대로 개선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예컨대,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줄이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부 학부모는 교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수단을 찾으려 할 것이다.

지금 교사 운동은 '교육권' 문제에 집

중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교사들의 고통은 '교육권'으로만 표현될 수 없는 많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들의 처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교육권 보장을 넘어 교사의 조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안이나 방안 마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정과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근본 문제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교원 감축, 재정 삭감 등 되레 교사들의 조건을 공격하고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를 더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려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나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도 문제다. 따라서 정부와의 협상보다는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위

기 심화에 직면해 긴축 정책을 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경쟁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양보를 얻어 내려면 만만찮은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정부로부터 개혁 조치를 얻어 내서 교사들의 조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교사의 위기는 자본주의 학교 시스템의 본질에서 비롯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다. 자본주의 경쟁 교육은 교사·학생의 소외를 심화시키고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양산한다.

이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국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학교는 점점 더 교육이 불가능한 곳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권 위기 문제를 체제의 문제와 연결해서 봐야 하고 그래야만 온전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교사들의 불만이 크고 개혁을 위한 열망도 작지 않아 운동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월 4일을 기점으로 운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듯하다. 예컨대, 법 개정 이후에는 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운동 참가자 다수가 '법 개정'을 향해 달려온 터라 이번 운동으로 무엇을 얻었는지부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운동이 터져 나온 초기에는 광범한 단결을 이루는 듯하다가도, 운동의 국면이 바뀌면 참가자들 사이에서 투쟁 방법이나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열을 가다듬은 뒤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으려 애를 쓸 것이다. 이 시점부터는 운동의 성장을 위해 더는 정치적 논쟁을 피할 수 없다. 지금껏 부각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고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 투쟁 전술을 둘러싼 논쟁뿐 아니라 교권의 개념이나 교권과 학생 인권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운동 내 이견이 있다.

교사 운동은 교사의 위기뿐 아니라 총체적인 공교육의 문제를 드러냈다. 따라서 일부 운동 참가자들은 근본적인 교육의 해법을 고민할 것이다.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사 운동의 잠재력을 제대로 현실화하려면 좌파는 운동 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근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웹사이트에서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정부 대책

“문제 학생” 배제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문제 학생”들을 배제시킬 권한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업 받을 의사가 없는 학생들의 폭력과 방해에서 수업 받길 바라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들의 출발은 행동에 난점을 보이는 아이(이하 ‘어려운 행동을 하는 아이’)를 성적 경쟁에서 학교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여기고, 맨 먼저 치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최근 일부 교사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겉보기로 그럴싸해 보이는 해결책에 매달리는 것, 심지어 피해 당사자인 아동을 빌런으로 여기는 해결책에 매달리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학생 배제 권한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는 교사들이 겪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어려운 행동을 하는 아동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미안하리만큼 딱하다. 그런 아이들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차별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혹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이, 극빈층의 아이 등이 더 높은 확률로 어려운 행동을 하는 아동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누구나 멈칫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배제하라는 주장이 참담하고 불행한 이유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바뀔 가능성을 일축하고, 그 아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공동선이라는 관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이 되도록 모든 아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일반 학급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통합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적인 방안

어려운 행동을 하는 아이를 이전에는 “부적응아”라고 불렀었다. 용어를 바꾸게 된 것은 단지 정치적 올바름 때문만은 아니다. “부적응”이라는 용어에는 결함을 순전히 아동 개인에게서 찾는 생각이 깔려 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다루듯, “부적응아”도 적당히 조이고 닦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아동의 행동은 외부 세계와



교사·학부모·학생은 뒤틀린 교육 현실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다. 2008년 12월 일제교사 반대 집회



사진 출처: amendingphotos.ac (플리커)

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컨대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과 교사에 대한 압박도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 해당 학교의 방침과 관리자들에게서 문제점을 찾아야 할 때도 자주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조사(“저 아이에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보다는 행동 분석(“그 아이는 무얼 하고 있지?”, “저런 행동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이 필요하다. 정신병리학적 추론보다 행동 관찰을 더 중시하는 것은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한 접근법이기도 하다.

때로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떼어놓아야 하더라도 그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아이가 긍정적인 또래집단 롤모델들에서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담 등으로 전문적 지원을 해 주는 교사는 그런 아이들이 ‘품행’ 관리 방안을 놓고 담임교사와 합의하도록 중재하고, 아이의 자기인식을 개선하도록 돕고, 분노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걸 조절하는 방법을 상담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와 전혀 다른 대처법으로는, 그런 아이들을 별도의 공간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반의 공식 명칭이 뭐가 됐든, 관련 교사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결국 그 반은 “문제아 반”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사회화 기회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되도록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동상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학급에 속한 채 일시적으로만 분리되는 아이들이 교사를 공격하는 경우는 드

물었지만, 일반 학급에서 사회화될 기회가 영구적으로 차단된 아이들 사이에서는 공격적 행위가 자주 벌어졌다.

어려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일반 학급 밖으로 쫓아버리자는 주장은 실제로 적용할 때에도 난관에 부딪힌다. 그런 아이들의 첫째 무리를 학급에서 쫓아내면 잠시 동안은 교실이 잠잠할지 모른다. 그러나 몇 주만 지나면, 이전까지는 절반 정도 순응했던 학생들이 서열을 타고 올라가 앞서 쫓겨난 아이들을 대신하게 된다. 현재의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양산될 수 있다. 학생을 일반 학급 밖으로 쫓아버리자는 주장은 교실 안에서, 그리고 교실 밖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어려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일반 학급에서 함께 수업하기 위한 도움과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근래에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를 계속 감축해 왔다. 게다가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 고용 불안,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입시와 성적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 왔다.

그 결과, 오늘날 교사들은 도저히 수업이 불가능한 교실에서 수업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어려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품을 수 있을 만큼 학급의 크기를 줄이라고 요구하며 교사들의 집단적 힘으로 그런 지원을 쟁취하려고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이 노동시장을 지향하지 않고 아이들의 진정한 발달을 위하는 것이 되도록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아니라 정부와 정부가 관철시키려는 체제의 우선순위가 진정한 빌런이다. 아이들은 이런 체제의 피해자이지, 결코 가해자가 아니다.

미국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지도부 중형 선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파시스트 무장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가 위기에 처했다.

지난 주 법원은 단체의 지도자 엔리케 타리오에게,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을 조직한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미 그 단체의 또 다른 주도적 회원들인 이선 노딘, 조셉 빅스, 재커리 릴이 각각 징역 18년·17년·1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도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에 가담했다. 이 폭력 사태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고 트럼프의 권좌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제 감옥 신세인 이들은 트럼프가 조만간 권좌로 돌아와 자신들을 사면해 주길 바랄 것이다.

‘프라우드 보이스’[‘자랑스러운 녀석들’]는 인종차별적 극우인 개빈 맥킨스가 2016년 9월에 창설한 단체다.

이를 통해 맥킨스는 트럼프 반대자들에 맞서는 남성만으로 이뤄진 부대를 만드려 했다. ‘프라우드 보이스’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와 페미니스트 시위대, 성소수자 시위대를 거리에서 몰아내는 데 힘을 쏟았다.



나치 돌격대를 꿈꾸는 ‘프라우드 보이스’

이들은 히틀러 돌격대의 이름을 따 “힉스터 갈색셔츠단”으로도 불린다. 맥킨스는 “나는 폭력을 원한다”고 똑똑히 밝혔다.

파시즘은 선거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바로 거리의 군대다. 그리고 ‘프라우드 보이스’는 그런 구실을 할 잠재력이 있는 조직의 하나였다.

미국에는 ‘프라우드 보이스’ 외에도 그런 조직들이 즐비하다. ‘오스키퍼스’[헌법 수호 서약을 지키는 자들], ‘스리 퍼센터스’[상위 3% 애국자들], ‘패트리엇 프레이어’[애국 기도], ‘부갈루 보이스’[‘부갈루’는 제2의 남북전쟁(내전)을 가

리키는 은어대 등이 그런 조직들이다.

‘프라우드 보이스’는 스스로를 서구 문명과 남성 특권을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투사로 여긴다. 여성과 성소수, 무슬림, 이민자, 유대인을 극도로 혐오하고 권위주의를 옹호했다.

이들은 다양한 ‘굿즈’를 파는데 그중에는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찬양하며 “피노체트는 잘못이 없다”는 문구를 박은 셔츠, “동네 소아성애자를 죽여라”[여기서 “소아성애자”는 극우가 민주당원과 성소수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는 문구를 박은 셔츠, 극우 암살단 문양 자수 등이 있다.

그들은 미국이 미국을 노예화시키려는 리버럴 공산주의 음모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를 막아낼 전쟁을 수행하는 트럼프의 보병이라고 여긴다.

경찰은 진압 방패와 몽둥이로 무장한 ‘프라우드 보이스’의 행진을 늘상 용인했다. ‘프라우드 보이스’는 권총, 심지어 자동화기로 무장하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시위대를 두들겨 패기도 했다.

‘프라우드 보이스’는 회원이 5000명을 넘는 적이 없던 듯하다. 그러나 그들의 동원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

2020년 9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는 친히 그들에게 물려서서 “대기하라”고 명했다. 그러자 ‘프라우드 보이스’는 “대기하라”라는 문구를 박은 다양한 ‘굿즈’를 제작했다.

트럼프와 ‘프라우드 보이스’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인물은 트럼프의 측근이자 자문인 로저 스톤이었다.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프라우드 보이스’는 트럼프가 이긴 대선을 바이든이 훔쳐갔다는 트럼프의 거짓말을 지지했다.

이듬해 1월 6일, ‘프라우드 보이스’는 자신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는 동안 트럼프가 대선 결과 무효를 선언해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 확신했다.

‘프라우드 보이스’는 반대자들을 제압하는 데서 자신들이 핵심적 구실을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트럼프에 이용당했다. 트럼프와 로저 스톤은 국회의사당에서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프라우드 보이스’를 이용하고는 그들이 공격받자 그들을 외면했다. ‘프라우드 보이스’가 아니라 ‘스투핏 보이스’[멍청한 녀석들]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존 뉴싱어

출처 John Newsinger, Jail for Proud Boys means they will be desperate for Trump win (2023. 9. 11) / 번역 이예송

점증하는 미국 나치의 공격 유대인 혐오를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옹호해야

롭 퍼거슨 유대인 사회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네오나치 단체들이 유대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을 상대로 악의적인 반유대주의 소셜미디어 선전에 나섰다.

몇 시간 만에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돌풍이 일어나 트윗 40만 건이 쏟아졌다.

주동자들은 거의 빠짐없이 미국 극우파의 유명 인사들이었다.

백인 민족주의자 키스 우즈는 #ADL 금지하자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ADL은 반(反) 백인 단체다. 이제는 #ADL금지하자.”

극우단체인 터닝포인트USA의 찰리 커크, 극우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갭(Gab)의 CEO 앤드류 토르바, 홀로코스트를 가짜 역사라 말하는 닉 푸엔테스, 네오나치 매튜 패럿 등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트위터의 새 이름] ‘X’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4시간 동안 28번이나 관

련 트윗을 올리며 해당 해시태그 트렌드를 전 세계적으로 적극 홍보했다.

머스크는 이전에 “소로스는 인류를 증오한다”며 유대인 금융가인 조지 소로스에 대한 반유대주의 공격에 동참한 바 있다.

ADL은 1913년 반유대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30년대에는 미국 나치에 반대했고, 1950년대에는 좌파에 대한 마녀사냥을 주도한 상원의원 조셉 매카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ADL은 이스라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학자들의 해고를 촉구하고 각종 소송전에 나섰다. ADL은 좌파가 우파만큼이나, 심지어는 우파보다도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매도한다.

ADL 전국 대표 조나단 그린블랫은 “반시온주의는 반유대주의다.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ADL의 이런 전력 탓에 일부 사람들은 극우의 해시태그 캠페인에 단호하

게 반대하기를 꺼리고 있다.

일부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직접 거들기도 했다. 하지만 반ADL 캠페인의 동기는 반시온주의가 아니다.

이 캠페인의 동기는 반유대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며, 이는 머스크가 X에서 네오나치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ADL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촉발됐다.

이 캠페인은 극우파가 저변을 넓히려는 시도다. 1920년대 자동차 산업의 거물 헨리 포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세계 최고 부자가 또다시 공개적으로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파시즘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

좌파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입장은 흑인 교수이자 논평가인 마크 라몬트 힐이 보여 줬다.

CNN은 힐이 “[요르단] 강에서 [지중해] 바다까지 자유로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ADL의 압력을 받아 그를 해고했다. [현재 요르단강~지중해

지역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힐은 올바르게도 머스크의 ADL 공격을 “심각한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머스크가 X를 “백인 우월주의 시궁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힐은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편에 서면서도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ADL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ADL에 대한 반유대주의적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반유대주의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주류화되고 있다.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좌파를 비롯해 인종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이다.

이에 맞서길 주저한다면 우리의 목도 온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출처 Rob Ferguson, “As Nazis in the US step up attacks, oppose antisemitism and defend Palestine”, (2023. 9. 11) / 번역 박이랑

모로코 지진

지배자들의 능력 대응, 가난한 사람들 피해 키워

찰리 김버

모로코 지진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국왕 무함마드 6세 정권의 부패와 총리 아지즈 아칸누시의 실패를 보여준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함마드 6세는 평소처럼 프랑스의 대저택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9월 11일 월요일 기준 사망자는 약 2600명에 이르렀다. 잔해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파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일요일, 모로코 대지진 진원지 근처의 공동체들은 파괴와 분노의 현상이었다. 현지 주민들은 맨손에 의지해 잔해 속에서 가족들을 꺼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약속한 구조팀은 찾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 위쪽의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아요.” 무함마드 6세는 대지진이 발생한 지 20시간이 지나고서야 모로코의 호화로운 궁전으로 돌아와 성명을 내놨다. 국가 차원의 중요한 결정을 집행하려면 왕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무함마드 6세의 능력 대응은 더 많은 희생을 낳았다.

존재하지 않는 국가

몰라이 브라힘에 사는 그래픽 디자이너 무스타파 이시데는 식량 지원이라고는 시민단체가 제공한 것들뿐이라고 말했다. “식량은 전부 모로코 시민들이 보내 준 것이었다. 앰블런스가 왔지만 거의 다 외국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은 모로코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 속하고, 전기나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집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모로코의 시골 마을 주민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뒤따른 인플레이션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

다. 올해 5월 무함마드 6세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긴축을 강요하는 IMF와 합의했다.

“[주요 도시인] 마라케시에서 한 발짝만 걸어 나오면 사람들은 마치 중세 시대나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듯해요. 이번 재앙과 같은 위기 때 한계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밝히 드러납니다.” 스탠포드대학교의 모로코 역사·정치 전문가 사미아 에라주키의 말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여러 차례 지진이 일어났고, 사회에서도 주변화됐습니다. 2016년 히라크 운동* 때처럼 사람들이 경제적 지원과 기반 시설, 개발을 요구하면 전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조차 이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본적인 기반 시설도 없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엉망진창입니다.”

늘 그렇듯 ‘자연재해’는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를 드러낸다. 규모 6.8을 기록한 모로코 지진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았다. 그러나 2022년 후쿠시마에서 더 큰 규모 7.4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건물이 더 잘 지어진 덕에 사망자가 4명뿐이었다.

모로코 내에서도 관광이 발달한 지역은 피해가 훨씬 적었다. 마라케시에서 게스트하우스 협회를 운영하는 사뮈엘 루르는 <르몽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진 피해 사진을 보고 마라케시의 소식을 들으면 이것이 같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주요 관광지인] 구시가를 둘러보고 있는데, 1만 채가 넘는 주택과 숙박 시설 중 무너진 것은 50채도 되지 않습니다.” 큰 타격을 입은 주변 마을과는 다르게 마라케시에서는 “공항·통신·수도·전기 등 기반 시설이 별다른 타격 없이 계속 운영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진 대비는 커녕 변변한 의료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프랑스에서 사치를 즐기는 무함마드 6세

측근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왕”이라고 추켜세우는 무함마드 6세는 막대한 사업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총재산은 최대 65억 파운드(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년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로 부터 7500만 파운드(약 1250억 원)를 주고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근처에 있는 대저택을 매입했다. 무함마드 6세는 방 12개가 딸린 샹 드 마르 공원 근처의 그 집을 매입하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국방장관이자 왕족인 칼리드 빈 술탄과 직접 흥정을 했다.

2022년에 무함마드 6세는 스페인 정부와 공모해 모로코에 위치한 스페인의 고립 영토 멜리야의 국경 지역에서 [스페인령으로 진입하려던] 이주민을 100명 가까이 학살했다. 지난해에는 모로코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료와 필수품 가격 폭등

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물가 폭등으로 끔찍한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2011년 아랍 혁명 때 모로코에서도 반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배층은 보잘것없는 양보를 내놓고는 탄압으로 대응하며 운동을 짓밟았다.

출처 Charlie Kimber, 'Poor hit hardest after Morocco earthquake as rulers delay response' (2023. 9. 11) / 번역 이진화

용어설명

히라크 운동

2016년 모로코 당국이 한 노점상 청년을 철거 과정에서 살해하자 촉발된 대중 운동이다. 경제위기와 소수민족 차별, 농촌 지역 배제 등에 쌓여온 불만이 폭발하며, 2011년 아랍의 봄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대중 운동으로 성장했다.

▶ 16면에서 이어짐

철도 노동자들도 자신감 있게 투쟁을 키울 필요가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그간 파업을 통해 철도 민영화를 막아 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좌절시킨 투쟁의 경험이 있다.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은 이후 박근혜 퇴진의 도화선이 되었고,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투쟁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었다.

그런 점에서 노조 지도부의 ‘풍당풍당’식 파업(나홀 파업 뒤 사흘 쉬고, 다

시 나홀 파업) 계획은 정부를 교섭 테이블에 끌어 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투지를 이끌어 내기에도 김빠지는 계획이다.

윤석열이 강력하진 않아도 한 노조의 일시적 파업에 밀려 쉽게 물러설 정도는 아니다.

파업의 기세를 올리려면 기층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더 부각하고 우선순위에서 높여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그간 임금과 인력이 억제되면서 노동조건이 별반 나아지지 않거나 후퇴

된 것에 불만이 상당하다.

그간 철도노조(와 상급단체 노조) 지도부가 정부 지침(총액인건비와 통상임금 등 예산 억제)을 거스르기 힘들다며 자기 제한적으로 투쟁하거나 필요한 투쟁을 회피해 왔다. 때로는 임금과 인력 수준에서 노동자들 간 존재하는 격차를 ‘완화’하자며,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양보(하향평준화)를 압박하기도 했었다.

이런 방식은 노동자들의 투지 고양과 단결력 강화를 저해한다.

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교사 노동자들이 대정부 투쟁을 재개한다. 두 투쟁이 공동의 적인 윤석열 정부에 맞서 동시에 싸우면 서로를 고무하고 연대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

철도노조는 잘 조직돼 있고 투쟁 전통이 풍부하다. 윤석열의 위기를 활용해 투쟁을 지속·발전시키면 양보를 끌어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신정환

※ 웹사이트에서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다.



사진: 이재환

경쟁 체제 강화, 임금·인력 억제에 맞선 철도 파업 정당하다

철도노조가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4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14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6.4퍼센트로 떨어진 가운데,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26.3퍼센트로 급감했다. 특히 철도 운송 비중이 높은 시멘트 업체들은 파업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친사용자·우파 언론들은 철도공사가 적자인데도 철도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에 나섰다고 비난을 퍼붓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적자는 공공 대중 교통의 복지 성격 때문에 생긴 '착한 적자'다. 운영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운영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며 생긴 것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했던)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파업의 주요 요구는 수서행 KTX 운행, 임금 공격 중단, 4조2교대제 전면 시행 등이다.

현재 철도가 철도공사(KTX 운행)와 SR(수서고속철도, SRT 운행)로 분리된 상황에서 SR이 운영하는 수서 노선에 철도공사의 KTX 열차를 투입하라는 것이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이다.

9월 1일부터 SR의 노선이 3개(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신설되면서 기존 2개 노선(수서-부산, 수서-목포)의 좌석수가 각각 하루 최대 4920석, 410석 감소했다. SR의 열차가 부족해서다. 철도노조의 요구처럼 감축된 기존 노선에 KTX를 투입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수서 노선에 KTX 투입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고속철도 공기업 간 분리·경쟁 체제 유지의 명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공격과 저항

정부는 철도 공기업들을 경쟁시켜 지금보다 더 수익성과 실적 위주로 운영하고자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노동자들을 경쟁시킨다. 경쟁 시스템은 임금 억제나 구조조정 등 정부 정책을 고분고분 따르도록 하는 무기가 된다.

예컨대 정부는 철도공사의 적자 폭이 크다는 이유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왔다.

사측은 올해 성과급 액수를 8퍼센트

나 삭감해 지급했는데, 온전히 지급하면 총인건비를 초과해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 간 성과 경쟁을 강요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도 제시했다.

적자 핑계로 인력 확충도 억제해 왔다. 야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4조2교대제를 도입했는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거부하고 있다. 인력 부족은 철도 안전과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 경쟁 체제 유지·강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해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철도 관제권(열차 운행과 관련한 각종 지시와 통제를 담당하는 업무)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조직이 작고 취약한 SR에서 야금야금 외주화를 늘리고 있다.

따라서 철도노조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철도 경쟁 체제 유지·강화, 임금 및 인력 억제, 안전 위협에 항의하는 정당한 투쟁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노동자를 괴롭히고 쥐어짜기는 어려울 것

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중의 불신을 받는 인기 없는 정부다.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제국주의 간 경쟁 등 다중적 위기의 해결책으로 윤석열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을 공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은 검찰과 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 강화, 흉범죄 흉상 철거 등 국가 기관의 우경화, 언론 길들이기 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공격도 꺼내 들고 있다.

요컨대, 윤석열은 강하지 않지만 우경화와 교통 전가 공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교사들의 대정부 시위가 두 달 만에 수십만 명 규모로 커졌다. 징계 협박에도 9월 4일에는 약 15만 명이 연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가했다. 정부는 징계 방침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 노동자 시위 운동은 윤석열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치적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도 아직 요구를 따내진 못했다. 시위가 재개된다. 교사 시위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힌트를 준다.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와 윤석열의 역사전쟁

9월 20일(수) 오후 8시

발제 김문성 <노동자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920-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